

벤처 활성화를 위해 전문화된 기술평가제도 필요

산업은행,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제도’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최근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제도(2호)’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이전 촉진법’과 ‘벤처특별법’ 등 기술거래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있지만, 미래가치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과 전문기관 및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벤처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의 표준화 추진과 평가모델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 기업금융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산업은행의 보고서를 정리한 글이다.

기술평가 개요

기술평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제성, 권리성, 대체성 및 기타 요인에 대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술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평가의 대상인 기술은 기업과 분리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체화된 기업의 인력,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하여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술로는 특허, 실용실안, 의장,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은 물론 기업의 기술적인 정보 및 자료, 기술적 용역, 기술적 지원 등을 포함한 노하우(Know-How)와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기술평가의 종류로는 기술의 사업화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술등급평가와 기업의 전반적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기술력평가, 기술거래나 기술담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기술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평가하는 기술가치평가 등이 있다.

기술평가 필요성

기술평가의 필요성은 크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따른 기술평가시스템 수요의 증가이다. 현재의 기술평가는 대부분 과거와 동업계 자료에 근거해 미래가치 평가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기술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법 및 기준자료가 미약한 실정이다.

둘째, 기업의 M&A의 급증이다. M&A시 통상적으로 기업의 기술성, 자금력, 마케팅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술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사업부의 분사,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에서도 기술가치평가 결과가 현물출자에 활용 가능해 앞으로 기술평가는 M&A시 중요 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셋째, 금융대출이 담보위주에서 신용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신용위주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미래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인정될 때 공정한 객관적인 기술평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국내경제가 유형 생산설비 위주에서 무형 기술자산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유형자산보다 무형기술자산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거래 또한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평가제도 국내외 운영실태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이전과 평가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방기구는 기술이전의 정보유통과 전문가 교육을 담당하고, 공공단체는 기술이전과 평가 담당자를 상호 연결하고 있다. 민간은 공공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거래와 기술평가를 수행한다. 일본 역시 약 40개 기술거래·평가기관이 정부산하, 학교법인, 재단법인의 형태로 활동중이지만 미국과 달리 해외 시장진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기술평가제도는 1997년 정부부처별 개별 법령에 의거해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기술평가는 주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정부기관, 연구소, 컨설팅회사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목적과 평가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에는 '기술이전촉진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기술거래를 위한 가치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정부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술평가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기술이전거래에 따른 가치평가와 기업 구조조정과정의 가치평가 등 수요가 지속되어 기술평가시장의 규모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평가제도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기술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평가가 기술거래 및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신력 있는 평가시스템이 미확립되었고, 기술의 특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인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또, 기술평가의 표준화 및 신뢰성이 미흡해 각 평가기관별로 작성되는 보고서가 용도, 절차 등에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 업무의 확산이 미흡하고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평가서 이용기관은 기술평가업무를 기술이전 및 거래용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기술평가보고서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평가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평가의 표준화 추진 및 평가모델 신뢰성의 제고이다. 이를 위해 기업체의 신용평가등급보다 더욱 세밀한 기술가치평가등급을 구축하고, 기술가치평가등급에 따라 기술거래소에서 기술이 매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가치평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수립 및 기업금융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평가와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일부 중소·벤처기업은 자체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 달성이 힘든 상황 이므로, '기술개발'과 '기술의 사업화'를 분리해야 한다. 또,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정확하게 평가되고 중소·벤처기업이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사업화시에는 기술평가결과를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지원과 정책적으로 연계, 기업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기술평가 수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기술평가업무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셋째, 기술평가제도 및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이다. 현재에도 기술평가제도와 기술거래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술의 사업화' 및 '기업경영'을 각각 분리하여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여야겠다. 구체적 내용으로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은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기술을 인수하여 사업화해 대금을 일시불 또는 사업화 이후 매출액의 일정부분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